

제426회 국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6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 2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 2  
가. 보건복지부 소관

(16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이수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3.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가. 보건복지부 소관

(16시03분)

○소위원장 이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오늘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본예산 때 심도 깊게 이틀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전문위원이 정부 측이 수용 의견으로 주신 거는 제목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되, 길게 설명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 설명 들으셨던 거라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불수용이나 일부수용일 경우에 그거는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 또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특히나 내용을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빠르게 넘어가서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연금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개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은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급여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본예산을 유지하자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공단 관리운영비 대비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10%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452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감액된 것이 637억입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인상률을 2.6%로 계상했는데 연말에 저희가 해 보니까 2.3%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금액 같은 경우도 34만 2510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고 부대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부대의견이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포함한 각종 변수의 신뢰도 높은 최신 전망치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지급 사업 예산안 편성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이걸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차관님, 질의를 좀 할게요.

정부가 기초연금 예산 감액 근거로 물가상승률 둔화를 제시했는데 물가지표 둔화가 기초연금 감액의 명확한 법적·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기초연금법 5조에 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의 5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재부에서도 2.6%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12월 달에 다시 추계해 보니까 2.3%로 3%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금년에는 34만 251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2.6%를 저희가 반영했을 때는—예상 상황입니다—3510원으로 지금 현재 지급액보다 1000원이 더 많은 액수였었습니다. 정확하게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기본소득 보장 성격이 강하며 급여액은 물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기준에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과거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 심사에서 이번처럼 물가상승률 둔화를 이유로 기초연금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 전에는 3.6%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최신 걸로 업데이트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전 정부에도 죽 보면 예상 물가상승률과 실제 물가상승률 오차가 0.3%에서부터 1.1%까지 골고루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국민에게 이례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은,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주된 게 소비쿠폰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러한 보편적 지원은 선심성 논란이 불가피한 반면에 기초연금은 매월 생계를 책임지는 필수 정책이자 상시 복지체계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지원은 증액하면서 정작 저소득 노인을 위

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예산 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신뢰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주고 있는 돈이 매월 34만 2510원을 1월 달부터 2.3% 인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당시는 우리가 34만 3510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김미애 위원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000원, 딱 1000원 차이입니다.

○김미애 위원 1000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래서 이것이 2.3%로 한다고 해서 지금 노인한테 드리는 그런 금액이 준 금액이 아닙니다. 그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추경에서 복지예산을 줄이고 지원금 예산을 늘리는 조치가 향후에도 반복된다면 상시 복지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저희가 예산 637억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어르신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액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그 액수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왜 과거에는 안 했는지 좀 의문이고, 기초연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물가상승률 둔화를 이유로 한 감액은 명분도 실익도 부족하고 국가의 복지철학과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예산 확보나 대중적 지지를 위한 보편 지원에 앞서 빈곤 고령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연금 예산과 신뢰부터 지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노인빈곤 해결과 실질급여 보장을 위한 강화와 개선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지급을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 우리 목표가 40만 원이었잖아요. 그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관리운영비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한 500억쯤 돼야 되는데 100억밖에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452억 증액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국민연금기금 전출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있는 것을 뒤로 넘길까요? 아니면 김미애 위원님께서 품격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이 정도 정부 의견에, 정부에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냥 정부안을 받는 것으로 할까요?

○김미애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아 놓으세요.

○소위원장 이수진 부대의견으로?

○김미애 위원 그리고 이런 선례를 계속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그 부대의견은 정부 측에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부대의견을 받고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복지정책관 소관 3개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추경안은 실제 수급자 수 증가를 고려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나 의료급여기금 등 기존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101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부대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의 자활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관리사업의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권익지원센터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하여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의료급여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기준중위소득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번에 화재 이재민 보호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155만에서 3만이 늘어 가지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증액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1341억이기 때문에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상당히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진숙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일부수용인데 사실은 수용입니다. 왜냐하면 12개월을 반영해 주셨는데 추경이 통과하게 되면 7월 중순쯤 될 것이고 8월부터 바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5개월분은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5개월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회복지종사자권익센터 지원 같은 경우도 530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1800만 원 일부수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 기간을 거치게 되면 9월 1일부터는 4개월 치를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반영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예산 자체의 감액·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률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정률제 관련된 것도 지난해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

고 있습니다. 즉각 철회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렵다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을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도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저희가 의료급여는 예산에 돈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료급여에 대해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회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도입안을, 의료급여 정률제에 관한 것을 재검토하시면 되는 거 같아요. 철회하라는 것까지는 제가 무리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난번에 이게 입법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결산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가지고 사실은 정률제 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를, 7월 15일까지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관련된 것은 수십 년 된 논의를 입법 검토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산안부터 먼저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지금 바깥에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것을 복지부가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계시긴 한데, 이게 어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지금 김선민 위원께서 어쨌든 그 이견에 대해서 수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로서도 수렴할 의사도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입법예고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난해부터 그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수진**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률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

차관님, 지난 16일에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이 복지부에게 의료급여 개편안 재검토하고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만나서 의견 수렴하라고 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재검토 얘기 들으셨지요,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 얘기는 저는, 보고는 제가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서미화 위원** 그런데 재검토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쭙본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만났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서미화 위원** 아직 못 만나셨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사실 지난 국감 때 저도 김선민 위원님하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서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들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의료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검사비 1만 원이 부담돼서 검사를 못 하겠다라는 환자들 많이 계십니다. 건강권 제약은 고비용 진료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고 계시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변환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는 상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7월 15일까지입니다. 충분한 의견을 들으면서 입법예고 끝나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입법예고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차관님, 진짜 전년도부터 계속, 전 정부에서부터 의료개혁에 다양한 영역들이 시도됐지만 굉장히 많은 반대와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16일에 대통령실에서 재검토 요청해 왔고, 이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좀 세심하게 또 진중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정말 의견을 잘 받으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민사회단체 만나셔서 정말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셔서요 그 결과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께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김선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예산까지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부대의견 관련해서 김선민 위원님과 서미화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부대의견을 정부에서 다시 손을 좀 봐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같이 의원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협의 좀 해 주세요.

다음이요.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6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3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시·도 사회서비스원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수용인데 사실은 수용입니다. 5개월 치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게 돼 있는데요 주로 1년 치를 많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수용은 거의 대부분이 실제 5개월, 4개월입니다. 운영비는 5개월, 신규 채용은 4개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거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따로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다음, 자료 7쪽입니다.

장애인정책국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세부사업인데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5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7개월 치를 반영하는 216억 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개월 치를 반영하여 15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단가 4000만 원을 인상하여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관련하여 제공기관의 공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1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과 관련하여 제공단가를 8310원 인상하기 위해 81억 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1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22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1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안마사의 자격증 수당을 신설 하되 월 30만 원을 돈으로 책정을 해서 31억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월 15만 원으로 해서 9억 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13쪽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2025년 제17회 WBUPA 마사지 세미나 개최 지원 예산을 신규로 3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14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대 및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5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소아재활통합모델 사업비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5개월로 저희가 일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은 5개월로 하시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쪽 같은 경우도 2개가 다 5개월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같은 경우도 5개월분 2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같은 경우도 최보운 위원님 것은 수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1쪽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수용입니다. 이것은 3개월분 해 가지고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12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운영비기 때문에 5개월분 반영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는 3억 그대로 수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4쪽에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억 7000만 원을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태연의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용하는 것인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있는 울산 지역의 8억 7000만 원 수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15쪽 같은 경우도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5개월 치를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용 빼고 일부수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1년 치를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실행이 가능한 5개월 치 때로는 3개월 치를 그대로 단가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복지부가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11페이지요, 차관님.

대부분 인건비나 이것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것을 잘 따라서 증액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왜 3개월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여기에는 사실은 일단 액수가 크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매칭이 필요한데요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3개월을 했고요. 3개월 하면 사실은 26년도에도 이 단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의 상황을 반영해서 3개월 한 케이스입니다.

○전진숙 위원 그 말씀은 지금 국비가 내려가더라도 시도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단, 이것만 3개월입니다. 다른 건 다 5개월을 했고요.

○**전진숙 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기본은 국비는 내년 2026년에도 지금 정한 기준으로 갈 거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임금 가이드라인에 채워져 있는 100%를 못 채운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 지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많은 액수를 5개월, 6개월을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일단 올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3개월 끝에 연계해서 가게 되면 사실 그다음에는 그대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개월 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12월부터 이렇게 3개월을 말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0, 11, 12입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12월부터 3개월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10, 11, 12.

○**전진숙 위원** 10, 11, 12 그러니까 그 3개월인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당연히 내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인건비를 100% 국비지원시설 다 하자고 했는데 장애인시설만,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해서 방금 여러 가지 숫자가 많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거기만 10월부터 하고 나머지는 9월부터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그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면 위원님, 이것은 똑같이 5개월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진숙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실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당초 본예산 유지를 위해서 299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후원 적극 연계 방안 검토 등에 대한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입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장조사 전문가 확대를 위해 5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아동 입양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자체 담당 전문인력 수당 및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6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양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관리인력 지원 등을 위해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것으로 총 18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현황조사 및 보존 지원 등을 위해서 13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서 11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CD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지자체로 집행액을 조사해 보니까 약 370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억 감액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입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된 것은 맞고요,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 그리고 밑에 있는 2개는, 지자체 아동 입양 통합 구축하고 입양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인데 이것 똑같이 5개월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있는 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4개월분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0쪽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개월입니다.

그리고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확대피해 아동쉼터 같은 경우도 5개월입니다.

그리고 19쪽에 있는 입양정책 지원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20쪽 같은 경우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이거는 5개월이 되겠고요.

그리고 21쪽에 있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 주셨던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차관님, 제가 오전에 전체회의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알지 못하는 아동이 있고, 사실은 아동은 알기 어렵고 아동을 보호하는 주 양육자 아니면 보조 양육자가 알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하기는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각 주민센터에 보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분들만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각 지역에 복지관이 있는데 그분들이나 통장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아동들이 통장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취지에 맞는 걸, 그다음에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거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그만큼 애를 쓰면, 하다못해 1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습관적으로 저금하는 습관을 들이면…… 1 대 2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17세까지 하고 24세에 찾으면 5만 원씩 넣으면 연 3% 복리를 하니까 5000만 원이 되거든. 그러면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아동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시드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아이들은 알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새 정부가 출범했고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서 더 많은 아동이 한 달이라도 더 빨리 가입하도록 가입을 유인할 생각을 해야지, 안 했다고 이것을 삭감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약 300억 정도잖아요.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수용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세요. 그게 맞지요. 그러면 아동을 위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왜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본인 자녀가 5만 원 불입하면 정부가 10만 원 보태서 월 15만 원 한다면 안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대상 아동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형편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1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날름 쉽게 이것을 감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수용곤란이라고 하지 말고 절반이라도 좀 살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아까 전체회의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300억 삭감에서 150억 정도 삭감으로 해서 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김미애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고 또 그것을 받아서 절반의 예산을 살려서 복지부가 노력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어려운 아동들, 통장 만들고 싶어도 1 대 2 매칭을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후원처를 마련해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계속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매년 후원금이라든지 지원 아동이 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요구되는 수요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직능단체나 이런 데 지원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기왕에 방금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후원처를 발굴하는 데 정말 열심히 뛰어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협조를 할 생각이니까 불용되지 않게, 예산은 절반 살리면서 이 예산이 취약계층 아동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이것은 절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21쪽입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입니다.

상당기관 인력 확충을 위해서 1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서 100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서 45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에서는 수용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일부수용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일부수용에 다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1년 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 5개월 치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노인정책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익활동형 일자리 처우개선과 시장형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1445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입니다.

부식비·취사비 지원을 위해서 295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국비 지원을 위해서 45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서 총 3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영광군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25쪽입니다.

1445억인데 저희가 1212억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가 인상은 5개월 그리고 공익활동형 11개월을 12개월로 한 달 늘리는 것 수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인데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4개월분을 반영한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5개월분으로 17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같은 경우는 2개가 그대로 수용이 되겠고요.

29쪽 같은 경우도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5개월 치를 반영하는 걸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30쪽에 있는, 이개호 위원님이 영광군에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3억

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내가 다른 이견은 아니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형사업단의 단가 인상은 공익활동형하고 좀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공익형은 29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겠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29만 9000원으로 더 올리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취지는 ‘더 많이 자유롭게 벌여 가세요’라는 건데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오히려 훨씬 떨어지거든요, 현장이. 뭐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돼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29만 9000원, 약 30만 원가량으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267만 원이 296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본예산 할 때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일단은 단가가 인상이 되게 되면, 한두 달이라도 되게 되면 그것은 그다음 연도에 그 단가 그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경로당 부식비·취사비는 100만 원을 월 그렇게 한다는 건가?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연입니다.

○김미애 위원 연? 경로당별로 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저희가 반영한 것은 월 1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치면 100만 원을 넘는 120만 원입니다. 더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김미애 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올려야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우리가 점심 제공 이렇게 여야 공히 공약을 했었잖아요, 총선 때. 이게 월 10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더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26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9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3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입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타운 시범사업 연구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23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16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공설 장사시설 순창군 수용입니다.

그리고 32쪽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같은 경우도 5개월 수용이 되겠습니다. 일부수용이 되겠고요.

돌봄센터 수용입니다.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일부수용인데 사실은 5개월 치기 때문에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김미애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전국이지요? 전국에 이것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256개입니다.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장 최승현 노인건강과장 최승현입니다.

256개입니다.

○김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1차관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제가 이렇게 소위 하는 중간에 후임자가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1차관 일을 수행하면서—2차관도 물론 했지만요—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연금개혁이나 보호출산, 위기청소년 또 위기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김미애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차관님 인사는 아직 안 났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안 났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 들어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시작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추경안이 9월 이후 전공의 정원의 50%가 복귀할 것을 가정하였으나 추가 복귀가 불투명하므로 459억 4400만 원 추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6쪽, 증액 의견은 하반기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고 수련 수요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예산 수준 유지를 위해 1235억 6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수련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예산을 현재 8개 과목에서 전체 전문과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37쪽,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원활한 근무조 편성을 위해 병동 추가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반예산으로 20억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첫 번째, 먼저 전공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80% 수준의 복귀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복귀한 인력이 미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숫자로 8월까지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다만 하반기에 정부 원안 짤 때 80%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49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부수용 의견으로 249억 원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윤 위원께서 부대의견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용, 동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께서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억 증액 요청 주셨는데 이것도 동의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차관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관해서 제가 1235억 증액 요청했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249억을 수용 의견 주셨는데 정부가 현재의 감액이 단순한 미집행액 정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축소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감액 이유로 전공의 복귀 저조를 제시한 것은 현재 복귀를 독려

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이미 전공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역시도 전공의 복귀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할 텐데 혹시 새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가 심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전공의 복귀를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비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저희도 동일한 생각인데 이미 3월부터 지금 현재, 8월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가 약 한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부터 원래는 전체 80% 이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짰던 바라 이미 미집행액이, 한 976억 정도가 불용액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그널 때문에 원안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증액 제기하신 것처럼 1200억 정도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여기 중에 한 1000억 가까이 976억 원 불용이 거의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명확하게 아시고 의사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249억 원도 좀 미스언더스탠딩(misunderstanding)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원안으로 가자 그러면 그것도 저희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용은 분명하게 정해졌다 그 말씀 좀 분명히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원안 그대로 가기에는 무리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일부수용이 249억 원?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249억 원.

○김미애 위원 그것은 전공의 정원의 몇 %가 복귀하는 것을 가정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것은 이제 9월부터……

○김미애 위원 12월까지.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원래 예산편성했던 80%가 복귀한다고 가정했을 때 249억 원을 증액하면 됩니다.

○김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시는 걸로?

○김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질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몇 %였고 지금 현재 몇 % 있습니까, 전공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12%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이 8개 과목인데요. 그 8개 과목에 한해서 계산해 보면 1086명, 그래서 12%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당시에는 몇 %였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 현황이요?

○김선민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12%가 얼마나 는 건지요?

제 질문은 이대로 가면 9월 되면 80%가 되느냐의 이야기인데요. 시그널을 보낸다고 해서 이게 80%가 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협의 회장이 사퇴를 하는 등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오늘 밤 9시엔가 전공의들 총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내부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 대표가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재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 249억 원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 아까 장관께서 얘기하신 걸 보니 건보 예산과 재정 이원화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고에서 노력을 하시되 건보 재정 확보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가 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 부대의견을 또 별도로 내셨습니까?

○**소위원장 이수진** 아니,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법정 지원 비율인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1조 6379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보험정책 사업관리는 신규 내역사업인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상담인력 채용·배치기준 관련 구체적 계획이 없고 21년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예정 채용 인원수의 70% 수준만 채용하였던 것을 감안해서 5억 98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은 본부 및 지역본부 상담인력을 4명 더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먼저 첫 번째가 건보 국고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남인순 위원께서 14% 수준의 지원을 국고에서 하는 걸 전제로 계산을 하였고 1조 6000억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 동의 의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험정책 사업관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번에 국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보공단 민원 대응을 위한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 코로나 때 경험을, 감액은 조금…… 어쨌든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요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보료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라는 게 2년 전 실제 소득 자료인데요. 실제로 현재 상황은 또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민원을 받아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적절하게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런 업무가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부안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감액 의견은 저희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김선민 위원께서 2200만 원 소규모 증액 의견 내셨는데 본부하고 지역본부에 상담인력 4명을 추가로 더 해라라고 하는 취지에 이것은 저희가 동의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선별 지원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15%와 25%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한 민원이 폭주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저는 왜 이런 걸 하는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데 이만큼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렇다면 수용을 못 하겠다면 지금 소비쿠폰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 행안위의 심사과정에서 지금 대상에 조정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복지부 예산도 그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김미애 위원 그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놓으세요. 그것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조정되면 조정되는 데 따라서 이 예산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 지원을 한다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런데 선별을 하면 사실은 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하면 왜 내가 그 등급에 못 들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민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별을 더 강화하게 되면 상담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지원 예산이 어떻게 심의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저희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된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상담인력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민원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에 따라 이것을 검토한다라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김미애 위원님 수용해 주셨고.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입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배터 개발 및 실증 사업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2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는데 복지부는 동 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면밀하게 기획하여 공고, 선정 평가, 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 지원 대상을 2개소 추가하고 지원 단가 5억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54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먼저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실증(R&D)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동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금년 내에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면 지원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기업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등 해 가지고 지금 국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이 사업 지원 예산은 조금 더 강하게 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정부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김미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대의견 단 것은 수용했기 때문에, 연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진숙 위원님 증액 의견 주신 것은 동의 말씀 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수용하십니까, 수용?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수용.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42쪽입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뇌전증 인식개선 및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예산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과 관련하여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내역사업에서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적자 해소를 위해 35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금액만 달리하여 8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자료 45쪽을 보시면 동일한 취지에서 44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4쪽에서 부대의견 1건이 제시되었는데 지방의료원 배정 예산의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자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5쪽을 보시면 적십자병원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9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6쪽입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의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모자의료센터 34개소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이 2건 있었는데 산과 전담팀의 신설과 관련하여 시범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전담팀 규모 및 운영방식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현행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시스템과 통합하여 모자의료 전원·이송 코디네이터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9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먼저 자료 42쪽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증액 의견 주신 것은 동의말씀 드립니다.

다음, 43쪽의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 그리고 전진숙 위원님 또 이수진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이 증액 요구 주셨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금액이 조금 상이한데 박주민 위원님은 24년도 실제 적자 규모로 예산을 제시하신 것이고 이수진 위원님은 기존 사업 단가 2배 인상을 제안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전진숙 위원님은 24년도 예상 적자 규모 차액으로 예산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수진 위원님이 제시하신 기존 사업 단가 2배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다만 적십자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의료원과 달리 국고보조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하면 62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대안으로 621억 원 증액에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 위원께서 부대의견 주신 내용은 저희가 동의말씀 드립니다.

다음, 46쪽의 이주영 위원께서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코디네이터 인건비 1억 7000 제기하신 내용도 동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47쪽 역시 이수진 위원께서 부대의견 주신 것은 동의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에 김선민 위원께서도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내용은 동의하는데 문구를 조금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원문구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둘째 줄에 보면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시스템과 통합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축이 필요하고 다만 금년에 구축할 때 바로 통합을 할 수가 없어서 구축하는 단계에서 통합을 전제로 설계하고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문구를 앞과 뒤는 다 똑같고 ‘향후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시스템과 통합을 고려하여 마련하고’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관련해서 이것은 김선민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9쪽의……

○소위원장 이수진 수용된 것은 따로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러면 49쪽 취약지 응급영상 판독은 동의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전부 다 경영 정상화 및 적자 해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원 전부 다 같은 액수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손실액의 몇 % 이렇게 정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혁신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취지는 적자액을 좀 보전해 주는 건데 사업 자체는 적자액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의 혁신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각 지방의료원마다 다 다르네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조금 다르게 됩니다. 개별 사정……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이것을 집행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될 텐데 지방의료원마다 지원액의 편차가 심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병원은 적자가 아닌 병원도 있고요 또 적자가 굉장히 큰 병원도 있고 지금 임금 체불까지, 적자뿐만 아니라 임금도 못 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의료원도 있고 해서……

○김미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손실액이 많은 곳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게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 것들이 이걸로는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50쪽 정신건강정책관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립정신병원에 38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39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5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50억 6500만 원을 추가 감액하자는 의견과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과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의견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실행행률을 높이고 국민들이 심리상담 접근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부대의견과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집행률을 근거로 예산을 감액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가 동의 말씀 드린 것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의견이 다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50억 4600만 원 주신 것과 그다음에 5억 원 포상금 감액 의견 주셨는데요. 2개 부분은 저희가 추경안을 마련할 때 이미 실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이 가능한 범위로 이미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주셨는데요. 김선민 위원 부대의견은 그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부대의견 원안을 보시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는 동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질의를 통해서 앞단의 내용은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부대의견의 취지가 정부로 하여금 예산 집행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수정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의원실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이것은 다시 시범사업부터 점검해야 될 사업이지 작년에 진행이 됐다고 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할 때 더 감액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지금 남은 개월 수 6% 곱하기 12로 해서 105억을 감액했는데 사실 앞으로 7월·8월 휴가철, 12월 연말에는, 연말정산 마지막 개월 때 대개 사업 위탁기관들은 사업 정리하느라 실제 다른 달처럼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제가 줄여 보니까, 11만 명 정도 되어 있는 현 숫자보다 좀 더 줄여도 되겠다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수용하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기재부가 지금 이것 사업 적정성 검토도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적정성 검토가 나와 가지고 본예산이 세워졌어야 했는데 적정성 검토가 이번 1월에 발표됐어요, 25년 1월에. 완전히 거꾸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적어도 적정성 검토에서 나온 최하 수준, 최하 30~60%가 과다 책정됐다고 기재부가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제시한 게

어려우시다면, 지금 25%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달이 휴가철도 있고 연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더 추가해서, 5%로 해서 감액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요. 5% 하면 저는 50억을 얘기했는데 21억 6500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5억이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서비스 신청률,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건수, 서비스 제공인력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서비스 이용률 이게 포상의 기준입니다. 지금 내가 나열한 것들은 결국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 기관에 주는 포상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 진행을 진행한 해에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주셨더라고요, 60개소가 넘는 기관에 700만 원씩.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서미화 위원 제가 그것도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바우처 사업 포상금은 당해연도에 주고 싶어도 왜 못 주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평가 도구가 수십 가지예요, 바우처 사업 포상 줄 때.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 줘요, 절대로. 그런데 이 사업은 이상하게 당해연도에 막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 요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것은 실적을 계속 부추기면서 많이 해라, 많이 해라 하면서 많이 한 데 또 포상금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시더라도 이번 해에 주실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올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포상금 주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답변드릴까요?

○서미화 위원 말씀해 봐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먼저 위원님께서 또 수정대안으로 좀 더 적은 금액의 감액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로 정신보건 문제는……

○서미화 위원 아니 차관님, 제가 질문한 것은……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포상금도 왜 당해연도에 주느냐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특히 젊은이가 겪고 있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정신보건상의 문제는 국가가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또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희의 책임은 이렇게 기왕에 국회 의결을 통해서 마련된 예산과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수행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덜어 드

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포상금 같은 경우도 이런 예가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것은 즉답드리기는 좀 어렵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무안에 사고 났을 때도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그런데 이것 포상금을 주면 이게 지자체하고 보건소에 가고 그 포상금이 개인들한테 뭘 나눠 주는 돈이 아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론적으로 봐도 그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대응하느라고 안에 경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포상 예산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일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포상금 예산을 할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업이 안착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당 공무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감액 의견 주신 것도 좀 조율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기재부하고 조율하면서 우리가 집행 가능한 어떻게 보면 최대한을 감액한 겁니다. 여기서 더 감액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에 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저희도 예측이라서 100% 그러면 다 쓸 거냐 이것을 100%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여유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 집행을 해서 현장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미화 위원 차관님, 제가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니거든요. 자살예방 이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든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되는 것인데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을 할 때 예타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수혜자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수혜자에게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게 다 제대로 안 되고 안 해 버리고 추계했어도 추계는 청년인데 청년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된 사업이에요.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사업 계속 지켜보고 자료 계속 요구해서 계속 제가, 하여튼 현장까지 가 볼 생각이예요.

이 바우처 사업이 실제로 예타 면제가 될 만큼 이 사업이, 예타 기준 다 아시겠지요? 예타 면제가 돼야 될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평가를 하려면 부정수급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같이 돼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당해연도에,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도대체 공적조서는 뭐고 포상금을 이렇게 제시만 하고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지를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안 왔기 때문에, 포상금을 당해연도에 안 줘도 되잖아요. 올해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충분히 평가를 하셔서 단돈 얼마지만 제대로 일한 곳에 드리는 것이 맞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료도 안 봤기 때문에 무슨 말 하기 어렵지만 그냥 숫자적으로 최고 많이 한 거 이렇게 하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평가는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제가 뭘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는……

○서미화 위원 평가 도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맞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도구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조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함과 동시에 품질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문제는 저희도 그걸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부정수급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산불 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정말 산불 현장, 이재민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불 현장에서, 이 마음투자사업이 바로 마음의 불도 끄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 봤더니 고령층의 정말 거동도 불편하신 양반들이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번에 이재민에 한해서는 좀, 이태원 사고라든지 무안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산불난 데 이재민들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좀 면제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재부가 어렵게 또 오케이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좀 더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것에도 추가로 감액을 한다면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하고 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께 충분한……

○서미화 위원 이용인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이용인 설문조사하고 전화 면접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것 포함해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맞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예,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연말에 최종적으로 사업 진행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요. 어느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하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평가를 중간에 막 해 가지고 포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중간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아니, 중간점검은 하겠지만 포상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니, 포상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장 답변한 것처럼 단순히 포상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 본 현장에서는 수혜받으신 분들 다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런 걸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믿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다 면접을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까지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를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마 마무리가 되면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차관님, 서미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성실하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자료는 빨리 제공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게 예산의 수립과 절차부터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잘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하나 갖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김윤 위원님도 발언 신청 하셨고 김선민 위원님도 발언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제가 줄었잖아요. 5% 정도 더 삭감해 주시고 포상은 내년에 하십시오, 다음 연도에. 이번 연도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러시면 아까 6%를 5%로 조정해 주신 거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포상 예산은 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 독려하고 할 때 굉장히 요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서미화 위원 그러면 21억 6500은 수용하고 5억은, 포상금은 유지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무안공항에도 저는 가 봤고 산불 현장에 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수용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김윤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자살예방 관련해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부대의견 수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실제로 정책화 또는 사업 확대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거는 조금 저희가, 오늘 질의를 주신 거라서 아직 깊게 검토가 안 돼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시도자들이 4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포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혹시 이것도 그렇고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러는데 앞에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될지, 대상을 얼마나 확대해야 될지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서 예결위원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거는 큰 사업 안에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

다, 18억이. 그래서 학회가 공식적으로 아직 의견을 주지 않아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18억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훨씬 좀 늘려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 안에는 조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학회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전공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아깝지 않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회들과 소통해 가지고 필요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그건 내역사업이니까 예산 액수의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고 이 응급실 기반 사업은 좀 검토하셔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거는 구체적인 실무 검토를 좀 해서 별도로 또 한번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예산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의견은 아니지만 지금 서미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희 의원실에도 좀 주셨으면 하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선민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미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산불 이야기하고 무안공항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계속 따져 볼 문제이지만 그런 답변은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5억이라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미화 위원님의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을 산불이나 무안공항 같은 데에다가 슬쩍 치환하는 것 그리고 추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가 전 국민에 엑스트라폴레이션(extrapolation) 하는 것은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여기는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하기 전에 아까 내가 하나만 좀……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미애 위원** 아까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에서 부산의료원이 임금체불까지 있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손실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제가 지금 자료를 아까 봤는데 갖고 오지를 않아서 그러는데요. 일단 부산은 지자체에서 체불 임금이 해소되는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외에 몇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 갖고 세수를 하겠다고 했고 다만 지금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조금 상황이 어렵고 이렇습니다. 아, 전남 강진의료원……

그러니까 재정이 좀 어려운 지자체가 노력은 하겠다고 했는데 확답을 아직은 못 준 상태이고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우선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승인해 주신 이 증액 예산이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의원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계속 누적되어 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6쪽, 건강정책국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입니다.

기본설계비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이미 법률도 되었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타당성 연구를 7월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게 끝나면 사실은 예타 등의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16억을 주셔도 저희가 금년에 이걸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도 모든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장 이수진** 그런데 차질 없이 진행된 게 맞나요? 약간 지연이 된 건 아니가요, 사업이?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지연된 건 아니고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이게 원래는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의 의문보다는 지역 간에 조금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잘 정리가 될 걸로……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이거는 정부 의견대로 하고 다만 부대의견을 하나 남길게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 정도.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7쪽, 첨단의료지원관입니다.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입니다.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 필요에 따라 반영된 21억 8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58쪽입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입니다.

데이터 제공 및 활용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반영된 30억 3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료데이터 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2건의 부대의견은 다 수용 의견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액 의견은 아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해서 R&D 투자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좀 성실히 잘 봐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원안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하면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요청했었던 사업들이고 그런데 기재부나 이렇게 해서 반영을 좀 못 시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추경의 테마가 민생 활력,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반드시 제대로 이게 추경에 반영했으면 이 취지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이지요.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차질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뒤에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하신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런데 이게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바우처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런데 이게 보통 민간에 100% 국고지원을 다 하나요? 모델 해저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본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것은 사업의 내용은 바우처를 주는 거라서 사실은 이 돈 갖고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냥 정부 돈만 갖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자부담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주고 전체 금액을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제 그것 이상의 소요되는 것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은 이 돈 가지고 다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비쌌니다, 이 데이터를 쓰는 것이. 그래서 보통은 구조상 자부담이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게 걱정되고 우려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할 때 일정 비율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이수진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의료데이터를 이용해서 AI 연구하고 사업화하는 것은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데이터 중심병원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이 굉장히 특화된 데이터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데이터가 얼마나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하고요, 표준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데이터 질의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잘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게 지금 한 번 하고 마실 것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 내년 사업에도, 내년 예산도 또 하실 거고 그렇게 하니까 사업 성과에 관한 보고를 반드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차관님도 한마디 하세요.

○**소위원장 이수진** 2차관님은 나중에 또 보시지 않습니까? 한마디 인사하시고 가시는…… 아니, 김미애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할 것 같은데?

○**김미애 위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김예지 위원** 또 뵈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2차관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안상훈 위원** 쫓아내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해.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도 며칠 후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짧은 기간을 2차관 하면서 의대 증원, 의료개혁, 여러 이슈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와 걱정 끼쳐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대한민국이 꼭 가야 할 방향이었고 공직생활 32년 넘게 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앞으로 나아왔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간에 많은 도움과 지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오늘 우리 예결소위가 웬지 이별하는 자리 같습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기획조정관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식약처 소관은 2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식약처가 모두 수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중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불량급식 및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AI 기술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식의약품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중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입니다.

금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면서 민원과 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7억 5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2건 모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장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초동 대응인력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에 22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비용은 3만 8000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만 명분 구입을 위해서 30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두창백신 216만 도즈 추가 구매를 위해서 51억 9700만 원 증액, 탄저백신 15만 도즈 추가 구매를 위해서 48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2024년 발생한 지자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서 356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저희는 모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지금 비축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내용은 신종감염병이나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미지급금과 관련되는 내용도 실제 접종 건수하고 저희 예산에 편성된 접종 건수가 차이가 나서 발생했던 미지급

금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질병관리청 소관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질병관리청 소관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부대의견 문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서명옥 서미화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청가 위원(2인)

강선우 김남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박민수

정책기획관 임호근  
복지정책관 배경택  
장애인정책국장 손호준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노인정책관 임을기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건강정책국장 곽순헌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첨단의료지원관 신타시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식품소비안전국장 김현정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조경숙